

“공수처 · 수사권 조정 실현할 것”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두번째 정책 구상 발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 임무 완수를 강조한지 하루 만에 두 번째 정책 구상으로 검찰 개혁 등 방안을 발표했다.



“검찰개혁, 국민 열망”
경제적 사정 반영해
‘재산비례벌금제’ 도입
범죄 수익 환수 강화도

조 후보자는 각종 의혹 제기와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깊이 반성하는 마음”이라며 “송구하다”고 재차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나 법무행정 개혁은 국민 전체의 열망”이라며 “따가운 질책을 받아 안으면서 이 문제를 계속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 분야를 발표한 후 두 번째로, 법무·검찰 개혁 정책을 내세웠다. 조 후보자는 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국회에서 검찰 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해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를 찬성하고 세부 의견을 제출했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은 수사권 조정 관련 합의를 이뤄냈다”며 “이에 기초한 법률안이 만들어져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돼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정부합의안의 기본 정신

을 지키되 열린 마음으로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법제화가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 등 부수법령도 조속히 완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재산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를 두는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등 벌금 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고액벌금 체납자들의 ‘활제노역’을 막기 위해 벌금 집행을 위한 압수수색 허용 등 재산 추적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현재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상관없이 법이 정한 각 범죄에 대한 벌금액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에 범죄 경중에 따라 벌금일수를 먼저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한다는 계획이다. 조 후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은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되는 반면 부유층은 가진 재산에 비해 벌금액이 적어 형벌로서 효과가 크지 않게 된다”며 “벌금 액수를 정할 때 경제

적 사정을 고려하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한다면 벌금의 형벌로서의 효과가 공평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끝까지 집행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현재 인력부족 등 문제로 추징금 환수율은 20%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라 환수 대상 중대범죄를 늘리고 피의자 조사 전 범죄수익을 먼저 동결하는 새로운 수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범인이 도망가거나 사망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수 없는 경우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한 소송은 절제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국민의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도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조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검찰청에 설치돼 있는 국가승무상소심의위원회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뉴스

“새만금 신항만 2선석 동시 개발 설계비 76억원 전액 반영돼야”

김광수 의원,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중인 김광수 의원(전주갑, 민주평화당)은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날 연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전북지역 핵심 현안사업이지만, 정부의 설계비 31억원 삭감으로 신항만 개발 계획에 차질이 빚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2040년까지 2.9 조원이 투자되는 새만금 신항만의 2선석 동시 개발을 위해 요구한 설계비 76억원이 전액 반영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2040년까지 41조8553억원(재정 16조 819억원, 민자 25조 7734억원)을 투자하는 계획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전체 사업비의 절반에 가까운 48.7%에 해당하는 20.4조원이 부산·울산지역에 집중된 반면, 나머지 신항만은 대부분 사업비가 3조원을 넘지 않아 항만별·지역별 사업비 격차가 너무 커 ‘부산·울산’을 위한 기본계획’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정부의 예산편제 사업과 조선·자동차산업 추경 예산의 지역 편중, 4.7조원 규모의 남부내륙고속철도 사업에 이어 제2차 신항만 건설에 이르기까지 현 정부의 주요 국가 SOC 사업이 PK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며 “특히 국가 주요 SOC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예산 배분으로 지역 편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성 기자)

“농식품부, TK출신이 장·차관 장악”

박주현 의원 “고위공무원도 42%가 영남 출신”

지난 9일 청와라 단행한 개각에서 영남 출신이 중용돼 친영남 개각, ‘호남출대 개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농식품부의 영남 편중 인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다.



농식품부 장관후보자로 대구 출신인 김현수 후보자가 지명되며 장·차관이 모두 영남 출신으로 꾸러진 상황에서 부처 내 주요 정책부서의 책임자 또한 영남 출신으로 구성돼 향후 농정정책의 영남 쏠림이 우려된다. 호남은 대표적인 농도(濃度)로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고, 전체 가구 중 농업 종사자 비율(16.2%)도 가장 높아 해수부가 분리된 후 경계 부처 중 농식품부만은 호남에 대한 균형인사로 고려되어 왔다. 더욱이 18개 부처 장관 중 영남 출신이 40%에 달하는 상황에서 농식품부마저 영남 출신이 장악하게 돼 호남출대가 가속화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박주현 의원은 “정부의 농정정책의 방향에 호남민의 생업이 좌우되기 때문에 농식품부 장·차관과 주요 정책부서 고위공무원의 특정지역 출신 편향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업과 농촌의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농식품부 내의 균형인사가 필수적이지만, 김현수 후보자가 이를 잘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의회 및 14개 시·군의회와 함께하는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 출범 기자회견이 2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실시된 가운데 의원들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복지 분권, 자치·지역공동체 회복 다짐

지역복지 향상 위한 전북네트워크 출범

도의회-도내 14개 시·군의회 참여

전북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지역복지향상을 위한 전북네트워크(이하 전북네트워크)'가 26일 출범했다. '전북형 복지모델' 구축을 위해 출범한 전북네트워크는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 분권과 자치, 지역공동체 회복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전북네트워크는 전북희망나눔재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군산시

의회, 부안군의회 등 도의회 시군의회가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체질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의 ▲독자적인 복지정책 개발 ▲지역 간 편차가 심한 복지예산 불균형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네트워크는 또 지역 실정에 맞

는 공공복지 전달체계의 혁신이 필요하다면서 ▲과감한 복지 인력 확충 ▲공공과 민간의 동반적 협력 ▲자율성 보장 등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 이해양 의원 등 관계자는 “지난 19일 전주여인숙 화재로 3명의 노인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관련 비극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더 이상의 복지사각문제를 막아보자는 취지다”라며 “시민사회와 전북도의회, 14개 시·군의회가 연대해 지역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김진성 기자

민주, 조국 가짜뉴스 생산

유튜브 채널 11개 법적조치 검토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 및 유통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유튜브 채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유튜브 11개 채널에서 생산된 13개의 허위조작 영상에 포털(18건), 사회관계망서비스(151건) 커뮤니티(16건) 등을 통해 185건의 허위조작정보로 재생산되고 있다”며 “분석결과를 토대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